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경제안보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경제안보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내 핵심광물 비축 확대 동향
- 미국 조선·해운 301조 조사 관련 동향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표(4.2) 주요 내용
- 미국 상호관세 관련 각국 반응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유아름 전문관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01

1. LNG 개요 및 전 세계 수급현황
2. 우리의 LNG 수급현황
3. 미국의 LNG 정책
4.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황
5. 분석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유지영 선임전문관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15

1. 美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개요
2.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3. 관찰 및 평가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황지현 전문관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22

* Cy McGeady, Joseph Majkut, Barath Harithas, Karl Smith. (2025.3).
“The Electricity Supply Bottleneck on U.S. AI Dominance.” CSIS.

1. 서론
2. 데이터센터 건설 제약 요인 및 미국의 전력 기반 현황
3.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발전원별 활용 가능성
4. AI 시대 미국의 전력 정책 전망
5. 결론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내 핵심광물 비축 확대 동향
- 미국 조선 · 해운 301조 조사 관련 동향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표(4.2) 주요 내용
- 미국 상호관세 관련 각국 반응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전문관

요약

-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액화한 연료로, 석탄·석유 발전 축소로 인한 부족 전력 생산분을 채우는 ‘가교에너지(Bridge Energy)’로 글로벌 수요 증가 전망
 - LNG 주요 수출국은 미국·호주·카타르이며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수입 / 향후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가속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LNG 수요 급증 전망
 -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2023년)으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 중, 주요 수입국은 호주·카타르 순이며, 2018년 이후 미국산 LNG 수입이 급증
- 미국은 2016년부터 LNG를 생산해 2017년에는 순수출국으로 전환, 트럼프 2기 정부는 에너지 지배력을 목표로 자국 내 LNG 생산·인프라 확대·수출을 장려 중
 - 트럼프 2기 정부는 美 국내 LNG 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플레이션 상쇄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목표
 - 미국 LNG의 대부분은 텍사스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서 생산·수출 중이며, 미 국내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
 - 對동아시아 시장 수출 관련 알래스카 LNG는 텍사스산에 비해 운송거리가 짧으나, 높은 개발비용(440억 달러)과 혹독한 기후로 개발·투자 지연 중
- 글로벌 LNG 수요 증가는 우리에게 LNG 선박 수요 증가 등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이기도 하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LNG 수급을 위한 수입 다변화도 필요
- 트럼프 2기 정부는 향후 LNG 수출을 외교·통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해 美 LNG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 필요

1. LNG 개요 및 전 세계 수급현황

■ 천연가스(Natural Gas) 기본 개요

- 메탄(CH_4)으로 주구성된 탄화수소계 가연성 기체로, 기존 화석연료(석탄·석유)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원

■ 가스연료 용어

- (PNG, Pipeline Natural Gas) 가스관을 통해 기체상태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 (LNG, Liquefied Natural Gas) -162°C 이하로 냉각(부피 1/600 감소)하여 액체상태로 만든 천연가스
-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원유 정제시 나오는 가스(프로판, 부탄)를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든 것 / 소규모 저장 및 운반 용이

■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액화한 연료로, 석탄·석유 발전 축소로 인한 부족 전력 생산분을 채우는 ‘가교에너지’로 글로벌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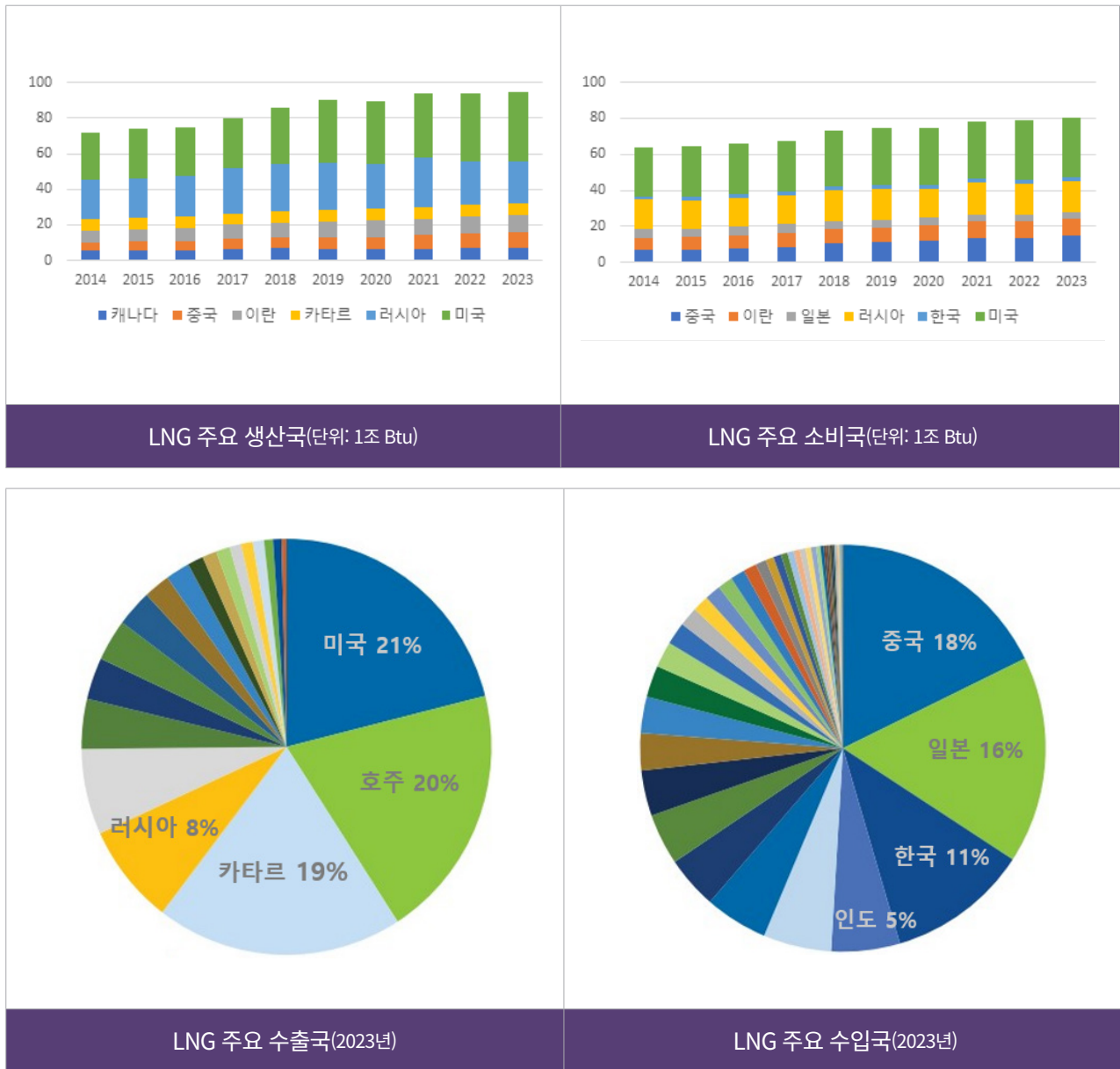
- (생산과정) 가스 정제(CO_2 , 황 제거) → 액화(부피 1/600 축소) → 저장 → 운송(LNG선) → 기화 (수입국에서 재기화 터미널을 통해 액화된 가스를 기체 상태로 변환하여 공급)
- (활용분야) 발전소 연료, 산업용 보일러, 수송용 연료(트럭·선박 등)로 활용
- (가교에너지) 석탄·석유 발전 축소 움직임으로 부족한 전력 생산분을 신재생발전(태양광, 풍력 등)이 충당하기에 한계(양수영, 2025)* → 석유·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 낮은 LNG는 필요시마다 전력 생산 가능

* 신재생에너지원은 발전량 조절과 연속생산이 불가능해 필요시마다 전력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된 잉여 전력분은 저장이 어려움 / 유럽은 잉여 전력분을 육상 전력망을 통해 이웃국가로 수출

■ 2023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美 41%, 러 24%)가 LNG 주요 생산국이며,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가속화 및 탄소배출 저감 움직임으로 LNG 수요 급증 전망(IGU, 2023)

- (공급 현황) 2023년 기준 LNG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러시아·카타르·이란 순이며, 수출은 미국·호주·카타르가 세계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
 -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수출량은 급감한 반면 미국과 호주의 수출량은 증가
 - 셰일혁명(2010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 2016년부터 LNG를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순수출국으로 전환

[그림 1] LNG 생산·소비·수출입 국가별 비교



자료: EIA 통계, IGU(2023)

- (수요 현황) 2023년 기준 세계 LNG 절반 이상을 아시아(韓·中·日·印)에서 수입 중
- (수요 전망) ▲중국·인도·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유·석탄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 글로벌 수요는 2050년까지 32% 증가할 전망(GECF, 2025)
 - * 중국 LNG 수요 지속 증가 중 (2010년 대비 2023년 3.7배 증가) / ▲빠른 에너지 소비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한계로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불가능 (화석에너지 81%, 원자력 4.6%, 신재생 8%)
- 그러나, 2023년 가동·건설 예정인 LNG 설비로 2050년 수요량의 73%만 생산 가능 → 향후 공급 부족 발생으로 LNG 생산 투자 필요성 제기 (Shell, 2023)

2. 우리의 LNG 수급현황

■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2023년)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에너지원 비중) 에너지 전체 비중인 1차 에너지믹스에서 LNG는 24.1%로 2위, 전력 생산 비중인 2차 파워믹스에서는 28.2%로 3위(2024년 기준, 지표누리)

※ ▲ (1차 에너지믹스) ①석유(34.7%) ②천연가스(24.1%) ③석탄(23.1%) ④원자력(12.6%)

▲ (2차 파워믹스) ①석탄(32.9%) ②원자력(32.1%) ③천연가스(28.2%) ④신재생(6.8%)

- (주요 수입국) 2024년 기준 호주(26%), 카타르(24%), 오만(12%), 말련(12%), 미국(11%) 순으로 수입 중

-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이 0.1%(2016년)에서 약 19%(2021년)로 빠르게 증가

[표 1]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비중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위	카타르 (38%)	카타르 (33%)	카타르 (34%)	카타르 (29%)	카타르 (24%)	카타르 (26%)	호주 (27%)	호주 (25%)	호주 (26%)
2위	호주 (15%)	호주 (20%)	호주 (19%)	호주 (20%)	호주 (21%)	호주 (21%)	카타르 (22%)	카타르 (21%)	카타르 (24%)
3위	인니 (14%)	오만 (12%)	미국 (11%)	미국 (13%)	미국 (14%)	미국 (19%)	미국 (13%)	말련 (16%)	오만 (12%)
4위	오만 (13%)	말련 (11%)	오만 (10%)	말련 (12%)	말련 (13%)	오만 (10%)	말련 (12%)	미국 (12%)	말련 (12%)
5위	말련 (12%)	인니 (10%)	말련 (9%)	오만 (10%)	오만 (10%)	말련 (9%)	오만 (11%)	오만 (11%)	미국 (11%)
6위	러시아 (6%)	미국 (5.5%)	인니 (8%)	인니 (6%)	인니 (7%)	러시아 (6%)	인니 (7%)	인니 (7%)	인니 (5%)
기타	미국 (0.09%)	러시아 (5%)	러시아 (5%)	러시아 (5%)	러시아 (5%)	인니 (5%)	러시아 (4%)	러시아 (4%)	러시아 (4%)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수입 방식) 장기계약(73%, 가스공사)과 단기계약·현물거래(27%, 직수입사) 통해 수입

- SK E&S, 포스코 등 23개 직수입사가 「LNG 직도입제」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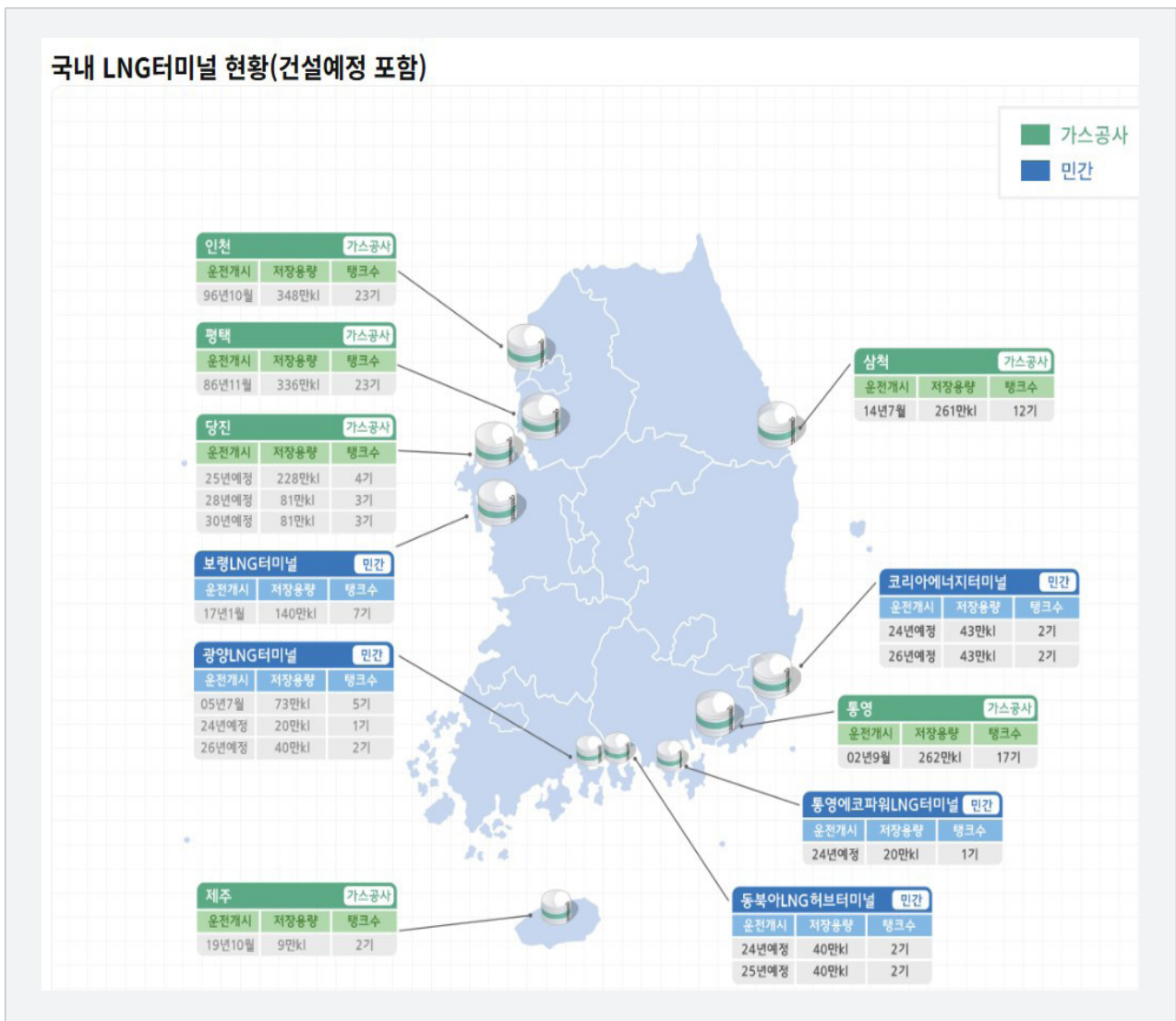
* ▲ LNG 복합발전소 전력 생산(SK E&S, GS EPS) ▲ 제철소·반도체 공장에 열공급(포스코, SK E&S)

▲ 對日 재수출(수입 LNG를 자사탱크 보관 후 해외 再판매, 포스코) 등

- (터미널 인프라) 액체로 수입한 LNG를 기화하는 재(再)기화 터미널 7개 운영 중이며 4개 건설 중
 - (운영 중) 가스공사 5개(인천, 평택, 통영, 삼척, 제주), 민간 2개(보령, 광양)
 - (건설 중) 가스공사 1개(당진), 민간 3개(통영, 울산, 여수)

※ LNG 비축은 「자원안보특별법(2025.2월)」에 따라 ▲(가스공사) 연판매량 평균 9일분 ▲(직수입사) 위기 발생 시 한시적 비축의무 법제화

[그림 2] 국내 LNG 재기화 터미널 현황



자료: 민간LNG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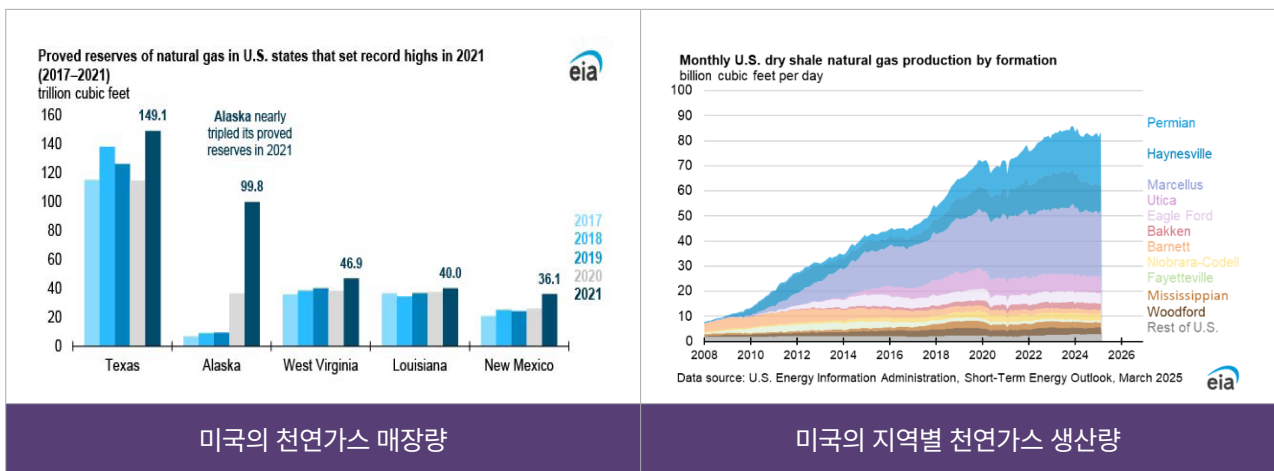
3. 미국의 LNG 정책

- 미국은 2010년 셰일혁명 이후 천연가스 생산량이 대폭 증가, 2016년부터 LNG 수출을 시작해 2023년에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

※ (주요 생산지역, 2022년) : ①텍사스(25%) ②펜실베이니아(22%) ③루이지애나(10%)

※ (주요 매장지역, 2021년) : ①텍사스(149조^m³) ②알래스카(99조^m³) ③W.버지니아(47조^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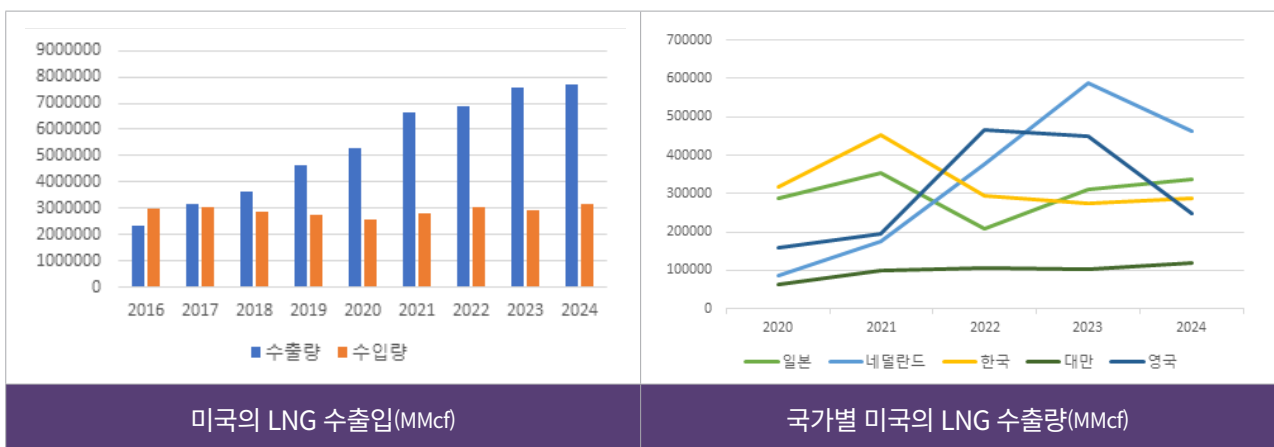
[그림 3] 美 국내 천연가스 지역별 매장량 및 생산량



자료: EIA

- 한국과 일본은 2022년까지 각각 1, 2위로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으며, 러·우 전쟁 이후 유럽(영국, 네덜란드)이 기존 러시아산 가스(PNG)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며 1위로 부상

[그림 4] 미국의 LNG 총수출입 및 국가별 LNG 수출량



자료: EIA 통계

■ 트럼프 2기는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을 목표로 LNG 산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추진

* 「Unleashing American Energy」,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서명(1.20.) 등

- 美 국내 LNG 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플레이 상쇄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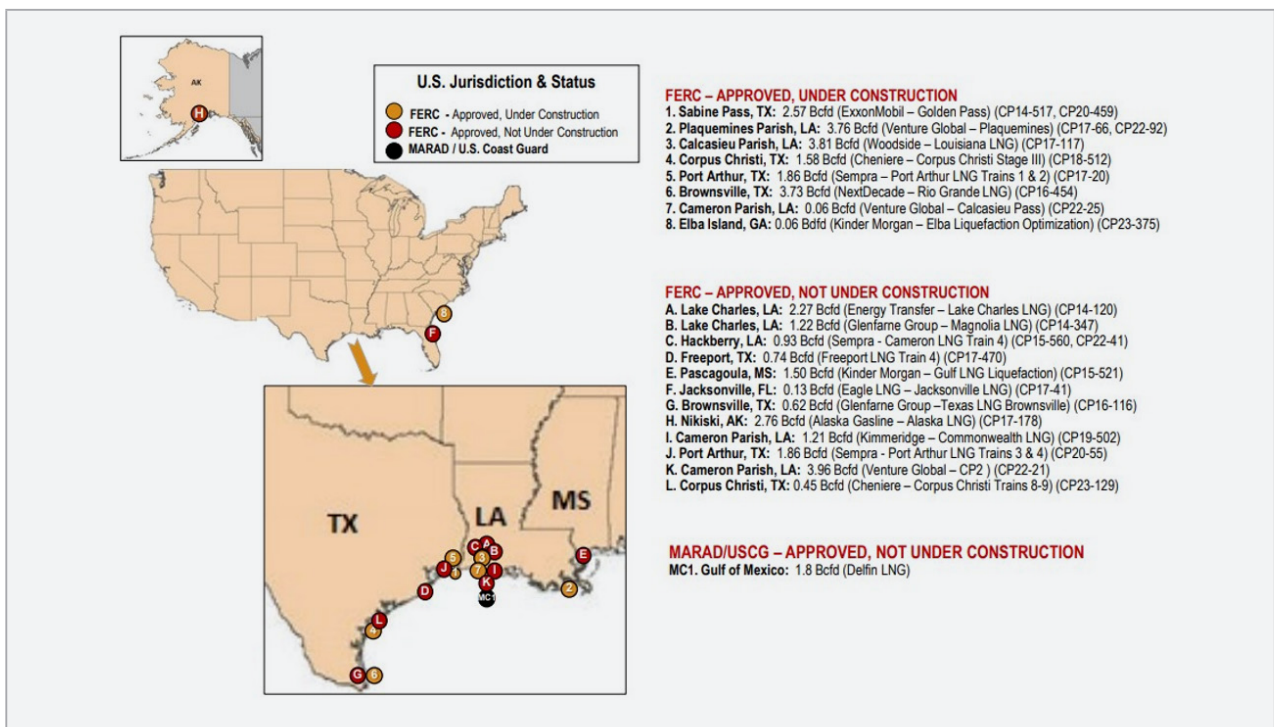
[표 2] 트럼프 행정부(1, 2기) 및 바이든 행정부 LNG 정책 비교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신규 LNG 채굴 및 탐사	장려	중단	장려
FTA 비체결국 수출	신규수출 확대 (EU, 日, 대만 등)	신규수출 심사 보류	신규수출 심사 재개
LNG 인프라 투자	강화	중단	강화
환경 규제	완화	강화	완화
LNG 외교전략	對유럽·아시아 LNG 수출확대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로 동맹국과 협력 강화	동맹국의 對美 LNG 개발 투자 유치·협력

- 2025년 현재 미국 내 8개 LNG 수출터미널 보유 중이며 총 21개 LNG 수출터미널 재개발 및 신규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태평양항(알래스카 니키스키 터미널) 1개 재개발, 그 외 20개는 대서양항(FERC, 2025)

[그림 5] 미국의 LNG 수출터미널



자료: FERC(2025)

-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직접 개발 참여(지분 투자·탐사·시추·구입 등) 제안 및 논의

※ (트럼프 대통령 언급) ▲“알래스카 석유·가스 관련, 美·日 간 합작투자 방안 논의 중”(美·日정상회담, 2.7)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韓·日 등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상하원 합동연설, 3.4)

※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대만·태국·한국·일본 방문(3.19.~3.30.) 및 프로젝트 참여 제안

4.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황

-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프루도베이)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LNG를 운송하여 수출하는 사업 / 가스관·처리시설·액화플랜트 구축 필요

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 내용

- (경과) 알래스카는 1960년대부터 LNG가 생산됐으나 2010년 남부 가스전 고갈로 알래스카 북부 개발계획 추진

- 2016년 사업성 부족으로 엑손모빌, BP 등 사업 참여 철회 / 알래스카 州정부 AGDC(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지속 추진 중

- 韓 가스공사-AGDC간 인프라분야 협력 MOU(2017년)를 체결하여 협력방안(타당성 연구 등)을 검토하였으나 성과 별무

- 에너지 사모투자회사(본사:뉴욕) Glenfarne Group가 동참 (2025.3.27.)

※ 프로젝트 지분 : AGDC(25%), Glenfarne(75%)

- (사업 목표) 2031년까지 가스관 건설 및 액화플랜트, 수출 터미널 (재개발)을 통해 對아시아 수출 개시

- (생산 규모) 연간 2,000만t / (총 사업비) 약 440억불* 추정

* ①전처리 설비 구축(100억불) ②가스관(1,300km) 구축(140억불)

③액화플랜트 구축(200억불)

- (예상 가격) MMBtu 당 6.57불 / (예상 상업가동 시기) 2031년



- 미국 동남부(텍사스·루이지애나)에서 생산되는 LNG에 비해 투자·운영 비용은 높으나, 한국·일본 등 對아시아 운송 기간 10여 일 단축 가능

- 알래스카 남부 부동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혹독한 북극 기후·지형 문제로 투자·운영 리스크 존재

- 단위당(MMBtu) 전체 생산 비용(추정) : (텍사스) \$3.5~4.5 vs (알래스카) \$5.5~6.5

- 현재 미국 LNG 수출터미널 8개 중 7개 대서양에 위치 → 아시아 수출 시 희망봉·파나마 운하 경유하며 알래스카산보다 운송기간·운송가격 높으나 총 단가는 낮음*

* (美→韓 운송기간·운송가격, MMBtu) ▲ 희망봉 경유(45일, \$1.8) ▲ 파나마 운하 경유(20일, \$1.3) ▲ 알래스카 경유(9일, \$0.45) (송승은, 2025.3.5.)

[표 3] 美 알래스카 vs 텍사스 LNG 프로젝트 비교

항목	알래스카	동남부(텍사스 등)
총 프로젝트 비용	약 440억 달러	100~200억 달러(프로젝트별 상이)
액화비용(MMBtu 당)	\$2.2~2.5	\$1.0~1.3
운송기간(美 → 아시아)	약 7~9일	20일 이상(파나마 운하 경유시)
전체 생산 비용(추정) (MMBtu 당)	\$5.5~6.5	\$3.5~4.5
장점	● 아시아 근접(짧은 운송거리) ● 美 LNG 수출 다변화 기여	● 저렴한 가스 생산비용 ● 기존 인프라(가스관, 터미널) 구축
단점	● 기존 인프라 부족 / 북극 기후·지형 변수로 인해 건설·운영에 고비용 소요	● 파나마 운하 혼잡 ● 對유럽 수출 우선 고려

자료: EIA, Alaska LNG Project 홈페이지, Medlock(2023) 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전문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과 비교 시 가스관 운송 거리당 총 프로젝트 건설비용은 비싸고, LNG 캐나다 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추정

- 미국 및 캐나다산 LNG는 단가가 비싼 편이나, 러시아·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어 LNG 공급선 안정화 등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여도 가능

[표 4] 주요 글로벌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비교

	알래스카	노르드스트림-1	시베리아의 힘	사할린-2	LNG 캐나다
개장연도 (건설기간)	2031년 예정	2011년(3년)	2019년(5년)	2009년(5년)	2025년 완공예정(8년)
명목건설비용	440억 달러	100억 달러	140억 달러	200억 달러	280억 달러
실질건설비용 (2031년 추정)*	540억 달러	170억 달러	207억 달러	390억 달러	470억 달러
운송거리	1,300km	1,200km	3,700km	800km	670km
1km당 단가**	420만 달러	140만 달러	52만 달러	216만 달러	698만 달러
연결국가	북부 푸르도베이- 남부 니키스키	러시아 북서부- 독일 북동부	러시아 동시베리아- 중국	러시아 사할린주 북동쪽 해상	캐나다 도슨크릭- 키티마트

	알래스카	노르드스트림-1	시베리아의 힘	사할린-2	LNG 캐나다
참여기업	AGDC, Glenfarne	가즈프롬, 윈터셀, 엔지 등	가즈프롬, CNPC 등	가즈프롬, 미쓰이, 미쓰비시 등	셸, 페트로나스, 페트로차이나, 미쓰비시 등
용량(연간)	2,000만톤	3,960만톤	4,392만톤	1,150만톤	1,400만톤

자료: EIA, 한국가스공사, 구정은(2023), Stognei et al. (2023) 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계산기준) 각 프로젝트 건설 당시 명목 비용에 美 소비자물가지수(CPI, 연 2.5%) 반영해 계산 :

실질건설비 = 명목건설비 x (2031년 CPI / 건설연도 CPI)

** 2031년 실질 건설비용 / 운송거리 (km)

5. 분석 및 시사점

■ 글로벌 LNG 수요 증가는 우리에게 LNG 선박 수요 증가* 등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이기도 하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LNG 수급을 위한 수입 다변화도 필요

*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선박 수요 2025년 대비 2030년 2배 증가 전망(Shell, 2025)

- 기존 중동에 치우쳐졌던 LNG 수입원이 호주(26%), 미국(11%) 등으로 어느 정도 분산됐다는 평가이나, 여전히 중동산 비중 36%로 높아 다변화 필요

- 중동산 LNG가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 및 미국산 LNG가 운송되는 파나마 운하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우리 LNG 수입량 중 약 35%(카타르 24%, 미국 11%)에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존재

※ 운송경로별 對 아시아 미국산 LNG 수출은 파나마운하 병목 등 리스크 발생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파나마운하(38% → 6%) 감소한 반면 희망봉 경유 대폭 증가(25% → 91%)(Shell, 2025)

-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LNG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LNG를 장기수급할 수 있는 수입원 확보 필요

※ 2025년 현재 가스공사는 안정적 LNG 수급을 위해 해외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호주 GLNG, 인니 SDLNG, 캐나다 LNG, 카타르 RasGas, 모잠비크 Coral ELNG 등)

- LNG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회 및 위기 요인을 고려해 리스크 헷징 대안으로 미국 LNG 수입 비중 확대,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도 가능

-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 등 장점도 존재하나 ▲높은 개발비용 (440억 달러) ▲LNG 가격 변동성 ▲美 정권 교체에 따른 LNG 정책 변동성 등 단점도 존재

※ 대만중유공사(CPC)는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 의향서(LOI)를 체결 (2025.3.20.), 대만 경제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CPC의 LNG 업스트림 투자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언급

■ 美 LNG 개발·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지배력 확보를 목표하는 트럼프 2기 정부는 향후 LNG 수출을 외교·통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해 美 LNG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 필요

● 미국의 LNG 수출 정책이 美 국내 정치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한 유연한 국내 에너지 정책 수립과 미국의 전략적 신뢰 파트너로 지속적인 에너지 협력관계를 유지

- 2010년대 중반 미국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수출하며 전 세계 가스 가격이 하락했던바, 미국의 LNG 수출 확대에 따른 국제 LNG 가격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도 필요

[참고] 주요 글로벌 천연가스 개발지도



자료: 연합뉴스(2021.7.21.), 연합뉴스(2019.12.2.), PBN Energy LLC(2022) 등

참고문헌

- 그레천 바크(2021). *그리드: 기후 위기 시대, 제2의 전기 인프라 혁명이 온다*. 동아시아.
- 대니얼 예긴(2021). *뉴 맵: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 리더스북.
- 양수영(2025).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다산북스.
- 오성익(2024). *처음 공부하는 석유가스 산업*. 매일경제신문사.
- 하라타 다케오(2024).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 지식노마드.
- 구정은(2019.12.2.). “러중 470조원짜리 가스관...‘시베리아의 힘’과 푸틴의 가스 정치학”. *경향신문*.
- 김용민(2024.10.16.). “다다익선 공급망 협정...외교가 최우선”. KTV 국민방송
- 김승준(2025.3.6.). “총투자비 65조, 사업성은 ‘글세’...달갑지 않은 알래스카 초대장”. *뉴스1*.
- 김우섭(2025.3.12.). “황금알 낳는 美 LNG 터미널...SK·포스코 등 투자 러시”. *한국경제*.
- 김형규(2025.3.18.). “美 천연가스 최대 장점 ‘가격’...중동산 보다 20% 저렴”. *한국경제*.
- 노남진(2024.8.26.). “러-우 전쟁 및 준동 분쟁에 따른 천연가스 시장 영향”.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17호.
- 송승온(2025.3.5.). “중동산 vs 미국산 LNG 운송비용은 얼마나 차이날까”. *에너지플랫폼뉴스*
- 송승온(2020.2.4.).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주변국과 경쟁력 충분”. *에너지플랫폼뉴스*
- 윤병호(2025.3.26.). “알래스카 LNG 필요 없겠는데...‘한국까지 10일’ LNG 캐나다 곧 준공”. *에너지경제신문*.
- 윤성민(2024.8.8.). “용인 반도체 ‘LNG열병합발전소’ 본격화...‘SK하이닉스 1500억 절감’”. *중앙일보*.
- 윤웅희(2025.3.27.). “EU의 천연가스 공급망과 관련 정책 추진 동향”. KOTRA.
- 이재원(2025.2.28.).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5-4.
- 이재인(2025.3.28.). “LNG 패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우리 기업의 기회는?”. KOTRA.
- 이재인(2024.1.30.). “미국, 원유·천연가스 역대 최대 생산량 기록 전망”. KOTRA.
- 정예린(2023.3.23.). “땡큐, 포스코 인터...국내 유일 LNG 사업 밸류체인 완성”. *더 구루*.
- 조원경(2025.4.23.). “LNG 수입의 중요성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현실적 고민”. *해럴드경제*.
- 주재현(2025.3.26.). “韓 찾은 알래스카 주지사 ”LNG 9일이면 한 온다...관세도 줄일 수 있어“. *서울경제*.
- 주영근(2024.12.19.). “알기 쉬운 에너지 이야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책임질 LNG 풀 밸류체인”. *포스코뉴스룸*.
- 최만수(2020.11.11.). “포스코에너지, 국내 첫 LNG 반출입 사업”. *한국경제*.
- 산업통상자원부(2025.2.2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4.3월). “에너지통계월보” vol.40-3. 에너지경제연구원.
- America Petroleum Institute(2024.11.12.). “API’s 5 point policy roadmap to secure American energy leadership and help reduce inflation”.
- Anastasia Stognei, Joe Leahy, and Yuan Yang(2023.5.25.). “Power of Siberia: China keeps Putin waiting on gas pipeline”. *Financial Times*.

- Adrienne Murray(2025.1.27.). “Insid
- Ben Cahill(2024.1.11.). “U.S. LNG Export Boom: Defining National Interests”. CSIS.
- Black & Veatch(2013.11월). “Alaska North Slope Royalty Study: Study Highlights”.
- DOE (美에너지부)(2024.12월). “Energy,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S. LNG Exports”. Office of 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DOE)
- Energy Institute, KPMG, and KEARNEY(2024.7월). “202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nergy Institute.
- EIA(美 에너지청)(2023.12.21.). “Where our natural gas comes from”.
- FERC(美 에너지규제위원회)(2025.4.1.). “United States LNG Export Terminals”.
- GECF(가스수출국포럼)(2025.3.10.). “Global Outlook 2050”.
- Glenfarne Energy Transition, LLC(2025.3.27.). “Glenfarne becomes lead developer for the Alaska LNG project”.
- International Gas Union(IGU)(2024.6.26.). “2024 World LNG Report”.
- Kenneth B. Medlock(2023.5.16.). “US LNG Exports: supply, siting and bottleneck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Leslie Palti-Guzmandddd Joseph Majkut, and Ian Barlow (203.1.17.). “U.S. LNG: Remapping Energy Security”. CSIS.
- Martin King(2022.2.27.). “An update on LNG export projects along Canada’s West Coast”. PBN Energy LLC.
- McKinsey(2021.2월). “Global gas outlook to 2050: summary report”. Energy Insights.
- Mike Fulwood(2024.1월). “What next for US LNG Exports?”.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Shell plc.(2023.2월). “Shell LNG outlook 2023”.
- Shell plc.(2025.2월). “Shell LNG outlook 2025”.
- The White House(2025.1.20.). “President Actions: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웹사이트]

- EIA(美 에너지청) 웹사이트(<https://www.eia.gov/totalenergy/data>).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s://alaska-lng.com>).
- 관세청 수출입통계 웹사이트(<https://tradedata.go.kr>).
-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 한국가스공사 웹사이트(<https://kogas.or.kr>).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주요국(美·EU·中·日)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경제안보리뷰 24-1호(2024),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리뷰 24-12호(2024),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등이 있다.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선임전문관

1. 美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개요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지속적인(large and persistent)’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미국의 주요 통상 이슈로 제기하며 상호관세의 부과를 1기부터 시도
 - (트럼프 1기) 무역상대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미국이 부과하는 내용의 美 상호무역법안(The US Reciprocal Trade Act)을 발의('19.1.24)하였으나 의회 통과는 무산
 - ('24년 대선 공약)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Agenda 47에 상호무역법 재발의를 공약 내용으로 직접 올리며, 양자 무역 관계에서 동등한 관세율 부과를 강조하고 무역적자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
 -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트럼프 1기에서 활약해 온 측근들도 '24년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관세 조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 (경과) '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지시한 조치 중 하나로 4.2일 발표
 - 1.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에서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
 - 2.13일 상호 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라는 각서를 통해 무역상대국들의 무역행위 검토를 USTR에 지시 → 4.1일 검토 보고 기한
 - 4.2일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 행정명령으로 조치 발표
 - (기본관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baseline) 관세를 4.5일부터 부과
 - *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공약 분석 시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로 불리던 조치의 형태
 - (개별관세)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된 개별 관세는 4.9일부터 시행 발표 → 현지시각 4.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해당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

2.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미국의 큰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 선포
 - IEEPA(국제비상경제제한법) 기반 관세 조치 명령

■ (목적) 금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으로 무역상대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지목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 조치의 필요성 역설

*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무역행위 규제를 위한 상호관세(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美 행정명령, 2025.4.2.)

- (MFN 평균 관세율 비교)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의 평균은 3.3%(WTO 회원국 중 최저)인데,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를 유지하고 있음을 비판
- (품목별 관세율 격차) 내연기관차 관련 미국은 2.5%의 관세율을 부과 중이나 EU는 10%, 인도는 70%, 중국은 15% 부과 중 / 에탄올에 대해서도 미국은 2.5%를 부과 중이나 브라질은 18%, 인도네시아는 30% 부과 중 / 쌀과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의 국별 격차도 언급
- (비관세장벽) 3.31일 공개된 2025년 국별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NTE) 보고서에서 확인된 무역상대국들의 여러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율 조치, 부가가치세 등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경제 조치들이 상기한 관세율 격차에 추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실제 GDP를 구성하는 소비(consumption) 비중이 미국은 68%에 달하나, 아일랜드는 27%, 싱가포르 31%, 중국 39%, 한국 49%, 독일 50%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음을 설명
- (농산물 무역) 무역상대국들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농산물 무역을 통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에 다시 증가함을 언급
- (제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01년 전 세계 생산의 28.4%를 차지하였으나 '23년 17.4%로 감소 / 미국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제조업(조선, 의약품, 기계, 가공 금속 등) 부흥이 필요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의 경제안보적 위험성을 경험한 점 상기 /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며 R&D 투자와 주요 특허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주요 동력이기에 미국 제조업 쇠퇴 추세를 뒤집을 조치의 필요성 역설

■ (구성) ①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 4.5일부로 발효, ②국가 개별 관세(Annex I) 별도로 책정, ③품목별 예외(Annex II) 존재 / 한국에 대한 개별 관세율은 25%

- (개별 관세) 총 57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10%+ α 인 별도 관세율 책정
 - (주요국*)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공 30% 등**

* 주요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4.2일 조치 발표 시 직접 가지고 나온 국별 관세율 표(미 백악관 공식 X 계정에 공개한 표)에 명기된 순서를 기준으로 명시

** 조치 발표 당시,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 대한 정확한 상호관세율 정보에 혼선이 있었으나 백악관에서 수정한 공식 Annex I 문서를 재업로드하면서 최종 관세율 확정

< 참고: USTR의 상호관세 책정 기준 >

※ USTR에서 공개한 Reciprocal Tariff Calculations 참고

- (개념) 양자 무역균형(0으로 수렴)을 이루는 관세율을 상호관세로 정의
- (가정)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요소로 인해 발생하므로 관세 조치의 부과는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게 함 / 환율과 일반균형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가정
- (산출식) [관세율의 변화량] = (수출량-수입량) / (가격탄력성*가격전이효과*수입량)로 산출된 관세율 변화량만큼이 적정 상호관세율이라고 상정

※ 기존 문헌을 통해 가격탄력성은 4, 가격전이효과는 0.25로 산정하여 계산 → $4 \times 0.25 = 1$

→ 전체 산출식이 특정 무역상대국의 [(수출량-수입량)/수입량] 으로 단순화

- (품목 예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현재 및 추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인 품목과 Annex II에 포함된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핵심광물, 에너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호관세 미적용 / 기제재국(북한, 러시아, 쿠바, 벨라루스) 수입품 제외
- (加·맥) 기 부과중인 마약·불법이민 관련 관세 조치에 추가적인 상호관세 조치는 제외
- (中) 기 부과중인 관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호관세 부과 예정 / 미소기준(de minimis) 관세 면제 조치에 중국만 제외하는 별도 행정명령(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d Imports, 2025.4.2.) 발표

※ 加·맥·中에 기 부과되고 있는 관세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과 내용은 유지영(2025) 경제안보리뷰 25-03호 참고.

3. 관찰 및 평가

- 미국은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자칭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공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제 여파를 우려하며 미국이 스스로 세계화 시대의 막을 내렸다고 평가 (Washington Post, 2025.4.5.)
- (세계화의 종결) 경제학자 Barry Eichengreen은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자유 무역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해 온 세계 경제 질서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 (The Chosun Daily, 2025.4.3.)

- 트럼프 1기 무역 고문을 역임한 Kelly Ann Shaw 변호사 또한 이번 상호관세 조치를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거래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지각변동적(seismic)이고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 (Guardian, 2025.4.5.)
- (경제 여파) 상호관세 발표 직후, S&P 500 지수는 5% 가까이 하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당시와 같은 영향이 나타났으며,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60%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 (Washington Post, 2025.4.5.)
- 거시경제학자 Maurice Obstfeld는 트럼프의 자의적인 관세와 이에 따른 무역상대국들의 잠재적인 대응 조치가 미국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전반적인 무역수지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 (PIIE, 2025.4.4.)
- 경제사학자 Douglas Irwin은 현재 국가들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보다 약 3배 이상 커진 만큼, 금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의 여파는 20세기 최악의 경기 침체 시기였던 대공황 당시 Smoot-Hawley 관세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 (The Chosun Daily, 2025.4.3.)

■ 금번 상호관세 조치 관련, 미국은 ▲임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의 관세율을 책정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추가 관세 조치는 지속 예고하며 ▲대중 강경 입장을 유지

- (Dirty 15) 미국 무역적자 규모의 약 15%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알려지면서 절대적인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USTR에 따르면 실제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대상국의 대미 수출입 불균형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
- 기존 상호관세 방식이나 우선순위 대상·품목에 대한 예측이나 금번 행정명령 두문에 나열된 MFN 평균 관세율이나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양자 비교 내용과도 사실상 무관한 상당히 임의적인 상호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먹구구식의 관세 조치를 적용 ([표1] 참고)
- 레소토(50%), 포클랜드 섬(41%), 피지 (32%), 바누아투(22%) 등 상대적으로 무역량도 적고 공급망 관련 영향도 적은 지역·국가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비합리성 관찰

[표 1]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방식

	수출·수입(달러)	수입(달러)	$\frac{[(수출-수입)/수입]}{100}(\%)$ = “대미관세율”	상호관세율
한국	660억	1315억	50%	25%
중국	2954억	4389억	67%	34%
일본	684억	1482억	46%	24%
EU	2356억	6057억	39%	20%
대만	739억	1162억	64%	32%
태국	456억	633억	72%	36%

※ 통계는 US Census 통계 (2025.4.3. 기준),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 활용.

- **(China+1)** 가장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5대 국가는 레소토 50%,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순으로, **베트남이 주요 표적국**
 - 그 외에도 인도(26%), 인도네시아(32%), 태국(36%), 말레이시아(24%), 방글라데시(37%)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부상하는 서남·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비교적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
 - 상대적으로 남미 지역 공급망을 구성할 수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들은 모두 10%의 기본(보편) 관세만 부과
- **(232조 기반 품목 관세 추가 예고)** 현재 대상 품목 외에도 향후 232조 기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에도 상호관세 적용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통해 **232조 기반의 품목 관세 조치가 향후 더 추가될 가능성 재확인**
 - Annex II에 포함되어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된 특정 품목들도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동시에 관련 미국 내 부흥을 위한 대미 투자 촉진을 추구하는 핵심 산업 품목으로, 언론에서도 232조 조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었던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핵심광물, 에너지 등이 포함
- **(Five Eyes)** 캐나다를 제외한 英·濠·뉴질랜드에는 10% 기본(보편) 관세만 적용
- **(對中 압박 강화)** 중국은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관세 조치의 대상국으로 계속 포함되고 있으며, 중북 조치에도 유예·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 4.9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추가 인상으로 총합 145% 관세 적용 발표

■ **조치가 유예된 기간동안 미국과의 우선 협상 중요 / 여전히 향후 ▲China+1에 대한 제재 ▲보조금 재협상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끼칠 영향 재고 필요**

- **(한국에의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 한-미 FTA 무력화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와 중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우리 중간재 수출 감소 및 한국 시장 내 수입품 덤핑 가능성 증가
 -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25%(232조), 자동차 25%(상호) 관세로 대미 수출 타격 예상 / 반도체 등은 현재 상호관세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은 추가적인 품목 조치 예고
 - 상호관세로 제3국 완성품의 대미 수출 감소로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 수출 감소 및 미국 내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각종 중간재 수입에도 차질 우려
 - 기존 중국산 전기차의 EU 시장 내 공급과잉과 같이 제3국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가 한국으로의 무역전환 확대 우려
- **(공급망 다변화에 차질)** 공급망 회복력을 목표로 과도한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해 개척한 제3시장에서의 대미 수출을 제재하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
 - 멕시코·캐나다와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그 외 제3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진출에 대해서도 복잡한 미국의 관세 영향을 따져볼 필요성 증가

-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세 조치를 부과하면서도 기존에 CHIPS법을 통해 약속한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
 - 아직 재협상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나 당초 보조금 수혜를 예상했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에 차질 발생 여부 검토 필요
- **(관세·수출통제 등 강화 가능성)** 반도체·핵심광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미국의 조치 강화가 종합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참고문헌

- Guardian (2025.4.5.) “Trump tariffs come into effect in ‘seismic’ shift to global trade”.
- Maurice Obstfeld (2025.4.4.) “Trump's tariffs are designed for maximum damage—to Americ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The Chosun Daily (2025.4.3.) “Economists warn of ‘global fallout’ as Trump escalates tariff war”.
- The White House (2025.4.2.)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_____ (2025.4.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retrieved from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 (검색일: 2025.4.5.).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ciprocal Tariff Calculations”, retrieved from <https://ustr.gov/issue-areas/reciprocal-tariff-calculations?fbclid=IwZXh0bgNhZW0CMTEA> (검색일: 2025.4.3.).
- Washington Post (2025.4.5.) “Trump may have just ended globalization as we know it”.

저자 소개

유지영 | jyoo25@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관점 변화와 국제통상체제의 과제” 「국제경제법연구」 (2024), “글로벌 AI 경쟁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의의”, 「KISDI AI Outlook」,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16) 등이 있다.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전문관

※ 원문 : McGeady, C., Majkut, J., Harithas, B., & Smith, K. (2025.3). The Electricity Supply Bottleneck on the U.S. AI Dominance. CSIS.

1. 서론

■ AI 및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이 미국의 AI 지배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확대

- 2023년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176TWh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 총 전력 수요량의 4.4%를 차지(LBNL, 2024) / 전 세계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최대 3.98배로 증가할 전망(McKinsey, 2024)
 - AI 전력 수요의 전망치는 하드웨어 기술, 알고리즘 발전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컴퓨팅 부문의 전력 수요 급증을 예측
- 이에 미국의 전력 공급 능력이 AI 등의 대규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 전력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2. 데이터센터 건설 제약 요인 및 미국의 전력 기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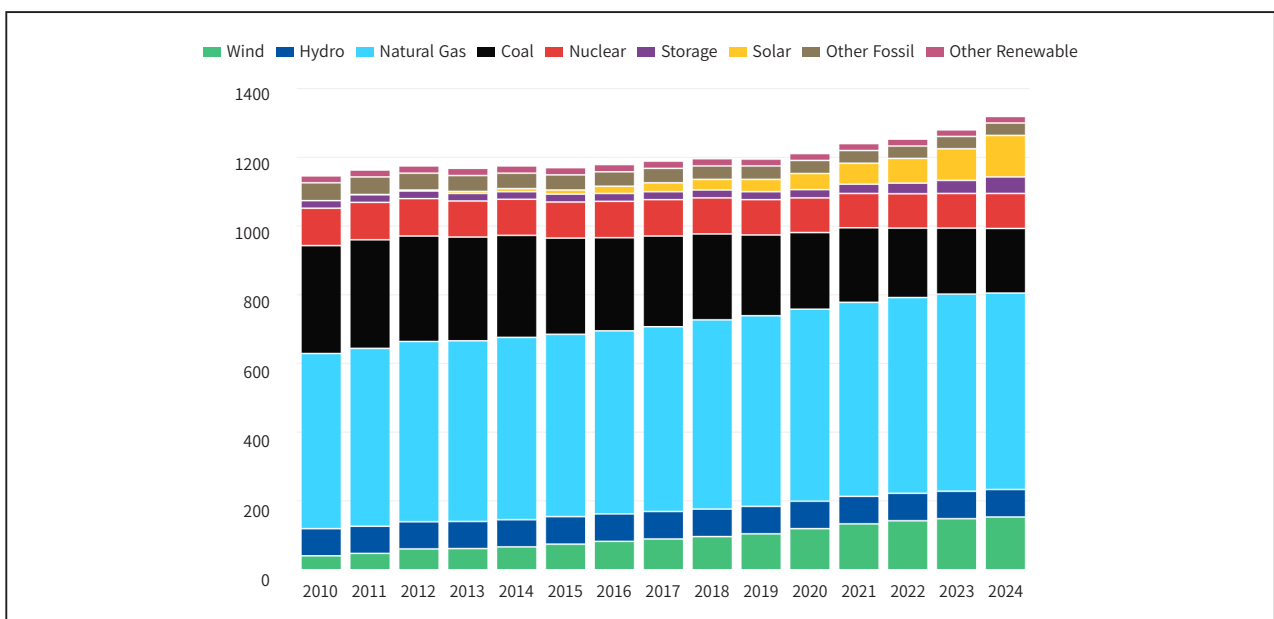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전력 확보 속도(speed-to-power)가 주요 요인으로 고려

- 전력 확보 속도는 ‘데이터센터 부지로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전력 공급 대기에 최대 7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동식 가스 발전소를 임대해 전력을 생산하는 등 전력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 향후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 전력 정책 및 토지 사용 문제를 감안해 텍사스, 버지니아 등 발전소 건설 허가가 용이한 곳으로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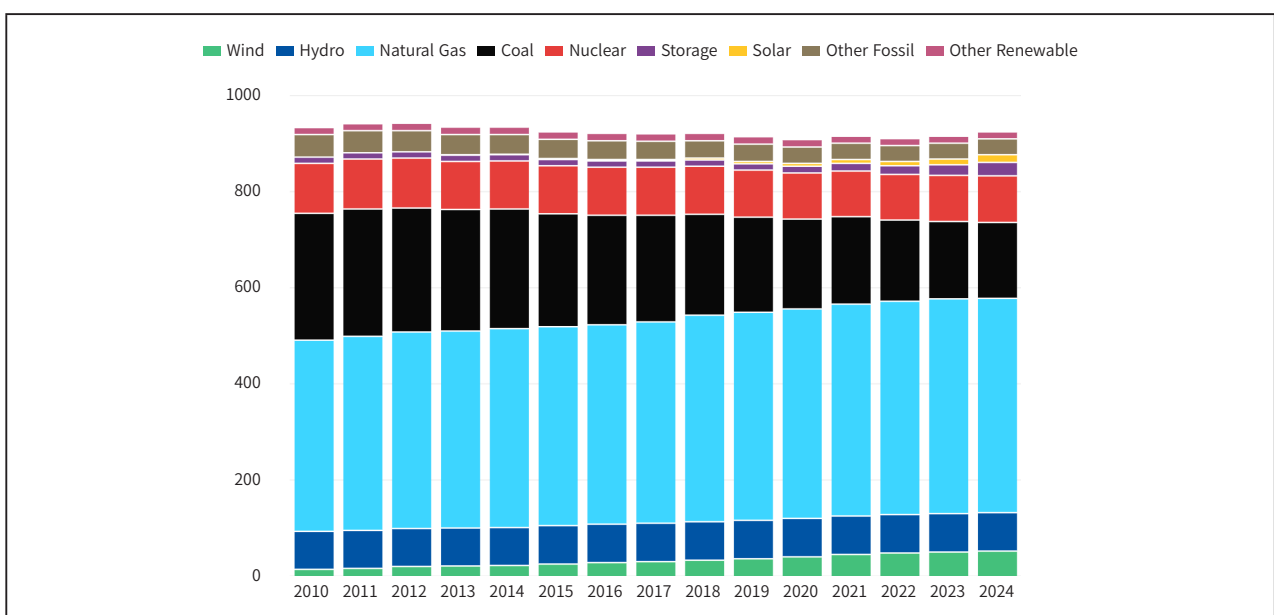
■ 미국의 명목 발전 용량은 증가 추세이나, 유효 발전 용량은 2010년 이후 정체

- 2010년 이후 풍력, 태양광 등 가동률이 낮은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명목 발전 용량은 증가하였으나 가동률을 고려한 유효 발전 용량은 정체 추세
 - 가동률이 높은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간헐적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여 유효 발전 용량은 정체 또는 일부 감소
 - 이러한 전력 공급 정체가 컴퓨팅 전력 수요 확대와 맞물리며 데이터센터 건설 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이 배가되었으며, 유효 설비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 대두

[명목 발전 용량(GW)]



[유효 발전 용량(GW)]



3.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발전원별 활용 가능성

■ (석탄)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석탄 발전의 감축 속도 지연

- 데이터센터용 전력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또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석탄 발전의 급진적 감축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전망
 - 다만, 석탄 발전소 노후화,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대비 경제성 악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는 석탄 발전 대체를 위한 조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천연가스) 유연성 자원으로서 천연가스 활용 확대 전망

- 가스 발전 설비는 美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부지 근방의 가스 발전소 건설이 증가 추세
 - 데이터센터를 그리드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가스 발전소와 연결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 Meta의 루이지애나 데이터센터, ExxonMobil의 텍사스 가스발전소 등

- 가스 플랜트의 건설은 통상 1년 이내로 소요되나 상류 부문 가스 터빈 등의 주문 및 생산이 지연되면서 가스 발전의 지속적인 확대는 제한될 전망

■ (태양광) 천연가스 등과의 복합적 활용 가능성 주목

-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력 생산을 위한 한계(marginal) 비용이 매우 낮으므로,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전력 믹스의 비용 개선 및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
 - 버지니아 Dominion Energy社의 데이터센터, Meta의 루이지애나 데이터센터 등 기존 발전원에 태양광, 에너지 저장 등을 조합한 포트폴리오 전략 활용이 확대

■ (원자력) 장기적 발전원으로서 조기 투자 및 지원 필요

- 원자력 발전은 2030년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원 기여가 확대될 전망
 - 2020년대 초 시행된 美 원전 조기 폐쇄 정책이 AI용 전력 수요 증가로 지연되면서 원자력 발전 감축 둔화 / 신규 원전 프로젝트 건설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AI 시대 미국의 전력 정책 전망

■ (2025-2030) 전력 확보 속도 중심의 전력 정책

- 향후 5년 이내의 중·단기 전력 수요 증가는 이미 개발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천연가스 ▲태양광 ▲에너지 저장 등에 의해 우선적으로 충족될 전망

- 발전소의 리드타임 문제로 단기적 전력 수요는 우선 수급 가능한 전력원 위주로 확보 가능 / 발전소 허가, 입지 선정 등 발전 부문 장애 요인 제거 중심의 전력 공급 촉진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규제 환경 개선 및 신속 허가를 천명한바, 전력 확보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

■ (2030-) 전략적 전력 우위 확립을 위한 전력 정책

- 전력 공급에서 지속적인 우위 유지를 위해 발전 믹스의 장기적 조정이 필요 / 원전 활용 등 발전원 다각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에너지 안보를 도모
- 미국은 주로 주 단위에서 전력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바, 연방과의 관할권 협의를 통해 에너지 연방주의를 유지하는 기조 또한 중요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송전선 등 인프라 건설 및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다대

5. 결론

■ AI의 부상은 전력 공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

- 미국의 에너지 전략은 기존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달성한 글로벌 우위와 유사하게 전력 공급 부문의 글로벌 우위 확보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
-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석유 · 가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 AI 지배 확대 및 전력 공급 우위 확립을 위해 AI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력 규제를 타파하고 전력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필요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리뷰 24-18호),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3.19.~2025.4.2.)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정부, 관련 규정 제도화를 통한 전략 광물 비축 체계 강화 추세

- (입법) 희토류 관리조례 제정('24.10월 시행), 광물자원법 개정('25.7월 시행 예정) 등을 통해 희토류 등 전략광물 비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직접 비축(제품 비축) 외 간접 비축*(생산능력 및 생산지 비축) 체계 마련
 - * 채굴 가능 광산을 필요시 채굴할 수 있도록 미개발 상태로 비축
 - 간접 비축을 위한 중국 내 광물 탐사 관련 국가지원금* 확대
 - * 中 정부는 '22년 이후 매년 지질 탐사에 1천억 위안(약 20조원) 이상 투자 중 /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25년 지질탐사 지원금은 '23년 대비 약 4배 급증(6억 5천만 위안 / 1,300억 원)
- (양회 내 언급) 국가발전개혁위는 2025년 양회에서 전략물자 비축 노력 가속화 언급 / 양회 종료 이후,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은 공급 탄력성 제고를 위해 전략광물(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등)의 비축 확대 보도(3.20)
- (평가) 안보 목적의 전략비축 외 가격안정화 목적의 비축도 동시 진행
 - 中의 광물 비축 정책에 따른 광물 수급·가격 변동 지속 관찰 필요

■ USTR, 中 조선·해운 관련 301조 조치 제안* 관련 공청회 개최(3.24, 3.26)

- * 美 입항 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 美 선박 이용 의무화 등
- (찬성) 美 제조업계(철강 등) 등은 USTR이 제안하는 중국 선박 규제와 더불어 美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필요 주장
- (반대) 美 해운업계·수출업계(에너지, 농수산물, 의류 등)는 ▲해운 비용 증가 ▲공급망 교란 ▲中 선박 대체 어려움*(노동력, 원자재 부족 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 관련 우려 표명
 - * 현재 한국 및 일본이 수용 가능한 선박 물량이 글로벌 수요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중국 선박 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조선소 재건에는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

■ ▲주요 무역적자국 대상 상호관세 ▲여타 국가 대상 10% 기본관세 발표

- (상호관세)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은 10% 최저관세 대신 별도 상호관세율 부과(4.9일 시행) / 한국은 25%(美 FTA 체결 20개국 중 최고)
 - 중국에는 기존 20%에 상호관세 34%가 추가되어 누적 54% 부과
 - * (주요국 상호관세율) 中 34%, 日 2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 (기본관세) 여타 모든 국가 대상 10% 기본관세 부과(4.5일 시행)
- (적용 제외) ▲ 既 관세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3.12~) 및 자동차(4.3~) ▲ (관세 부과가 예고된)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및 ▲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광물 등에는 미적용
 - (캐나다·멕시코) 상호관세 未적용 / 기존에 부과된 펜타닐·이민 관련 관세 조치*(3.4.~) 유지 ➡
 - ▲ USMCA 적용 품목은 무관세(0%) 지속 ▲ 비적용 품목에는 25% 부과(에너지·비료 품목은 10%)
 - * 동 캐·멕 대상 펜타닐·이민 관련 관세 조치 종료 시에도 ▲ USMCA 준수 품목은 무관세 혜택 지속 ▲ USMCA 비준수 품목에는 12% 상호관세 부과
- (미국산 부품) 미국산 부품 20% 이상 사용 상품의 경우, 미국산 부품에 해당하는 가치(content)에는 미적용

■ 美 상호관세 관련 각국 반응

- (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서에서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4.3일)
- (EU)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합법적이고 비례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재확인(4.2일)
 - * EU 집행규정(EU Enforcement Regulation)에 따른 전통적인 관세조치 활용 가능성 언급
- (日) 경산대신과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스럽다(extremely regrettable)고 표현하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언급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3.21.	[관세] 中 정부,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발효 : ▲ 카놀라유, 완두콩, 잣묵 등에 100% 관세 ▲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 25% 관세 부과 *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24.10.1~)에 대한 보복 조치로 對캐나다 보복관세 부과
	3.21.	[희토류] 중국과학원 연구진,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지배력 10년 내 상실할 것으로 분석 : 2035년 희토류 원자재 생산 점유율 28%로 감소 예측
	3.21.	[핵심광물] 국가양식물자비축국, 코발트·구리·니켈·리튬 등 핵심금속 전략비축 확대 계획
	3.22.	[경제] 中·日 고위급 경제대화 6년만 개최 예정
	3.22.	[해저케이블] SCMP, 해저 채굴 및 심해 케이블 절단 가능 장비 개발 보도
	3.24.	[제재] 국무원, <反외국제재법> 실시규정 발표 및 당일부 시행 공포 : 對중국 제재 조치에 대한 체계적 법적 대응 체제 마련
	3.26.	[비스무스] 중국 및 글로벌 시장 비스무스 금속 가격 폭등 : ▲ (내수 가격) '25.1.2. 73,000위안/톤 → 3.20. 155,000위안/톤 (112% ↑) ▲ (수출 가격) '25.1.2. 10,053USD/톤 → 3.20. 21,462USD/톤 (113% ↑)
	3.28.	[알루미늄] 산업정보기술부, 알루미늄산업 고수준발전 실시방안(2025~2027) 발표 : (주요 내용) 알루미늄 원자재 자급률 제고 및 알루미나 산업 구조조정 등

국가	일자	내용
미국	3.13.	[관세] 트럼프 대통령, EU가 미국산 버번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EU산 주류에 200% 관세 부과 언급
	3.17.	[미중관계]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방미 가능성 언급
	3.18.	[관세] 베센트 재무장관, 對美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전 세계 국가의 15%를 이른바 “Dirty 15”로 지칭
	3.19.	[관세] 백악관 참모진, 4.2. 신규 관세 부과 계획 준비 중 : 美 트럼프 대통령, 4.2.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언급(3.16)
	3.20.	[반도체] 반도체 기업 Nvidia, 향후 4년간 미국 내 제조 운영에 수천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3.20.	[광물] 트럼프 대통령, 美 광물 생산 증대 관련 행정명령* 서명 : (주요 내용) ▲우선 프로젝트 지정 ▲1872년 광업법 개정 ▲연방토지 활용 및 광물 채굴 촉진 ▲민간·공공 자본 투자 활성화 등 * 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3.21.	[통신] 연방통신위원회(FCC), 화웨이 등 8개 中 통신장비업체 조사 착수 : 커버드 리스트* 포함 업체들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대규모 조사 착수 * (Covered list) 美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
	3.24.	[투자] 미 하원, 對중국 해외투자 규제 법안(FIGHT Act) 발의 : ▲중국 관련 단체 제재 ▲미국의 對중국 투자 규제(반도체, 양자 등) * Foreign Investment Guardrails to Help Thwart China Act
	3.25.	[수출통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중국 베이징AI연구소 등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재 : 80개 기업과 단체(중국, 이란, 파키스탄, 남아공, UAE, 대만)를 추가/주로 Nvidia, Intel, AMD의 미국 칩을 대량으로 구매해온 기업을 단속하는 것으로 관찰
	3.25.	[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관련 2단계 접근 고려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법 338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 부과(4.2) 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동 관세를 장기화할 가능성
	3.26.	[구리] 뉴욕상품거래소(NYMEX) 구리 선물 가격, 사상 최고치 돌파 : 파운드당 5.2255달러 돌파 / 연내 누적 상승률 30%
	3.26.	[제재] 상무부 무역안보국(BIS), 중국, 파키스탄, 이란, UAE 등의 기업·기관을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추가 : AI, 슈퍼컴퓨터, 양자기술, 방위산업, 정밀계측 등 분야 中 기업·기관 54곳 Entity List 추가
	3.26.	[관세] 블룸버그통신, 美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대상 관세 부과 결정이 이르면 수주 내 이뤄질 가능성 보도
	3.31	[투자] 트럼프 대통령, 투자 촉진 기구 설립 행정명령 발표 : ▲대미 투자 촉진 ▲불필요 규제 철폐 등의 내용으로 기존 반도체법에 따른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흡수
	3.31.	[관세] 트럼프 대통령, 4.2.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예정
	4.2.	[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4.2.	[관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25% 발효 예정(4.3.)

국가	일자	내용
미국	4.2.	[관세] 트럼프 대통령, 對중국 미소기준 면세 적용 중단 행정명령 발표 : 당초 미소기준(de minimis) 적용으로 면세 대상이었던 중국 및 홍콩발 배송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일본	3.13.	[외교] 日美 외교장관회의 개최
	3.18.	[사이버안보] 日 국회,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관련 법안* 심의 시작 * (핵심 내용) ▲민관 공조 강화 ▲중대한 공격 예후를 탐지하기 위한 통신정보 감시 등
	3.22.	[경제] 제6회 日中 고위경제대화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수산물 수입규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등
EU	3.12.	[바이오] EU 이사회, 신유전체기술(NGTs; New Genomic Techniques)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 권한에 대해 합의
	3.19.	[방산] 집행위원장, 재무장유럽계획/대비태세 2030 로드맵 발표
	3.19.	[원자재] 집행위, 유럽 철강·금속 행동계획 발표 : (주요 내용)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철강 생산 확대
	3.20.	[관세] EU,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2단계 보복조치 시점 조정 : 두 보복조치* 모두 4월 중순(4.13) 발효 추진 * ▲트럼프 1기 시 마련해둔 80억 유로 규모 보복관세 ▲180억 유로 규모 신규 보복조치
	3.20.	[철강] EU 회원국,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안) 승인 : EU 개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승인 / 4.1일부터 적용 예정
	3.25.	[원자재] EU 집행위, EU 핵심원자재법에 따른 첫 전략 프로젝트 목록 발표 : EU 13개 회원국에 걸쳐 ▲리튬 ▲니켈 ▲흑연 등 총 47개 전략 프로젝트 선정
	3.26.	[관세] EU 집행위, 美 자동차 관세 25% 부과 발표 관련 성명 발표 : 유감 표시 및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 방법 지속 모색 의지 표명
	3.26.	[공급망] EU집행위, 핵심원자재 및 필수 의약품 비축을 확대하는 '위기대비 연합 전략 (Preparedness Union Strategy)' 개시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도모
	4.1.	[자동차] EU 집행위, 폐차 재활용 카르텔 과징금 부과 : ▲(대상) 16개 차량제조사 및 유럽자동차제조협회 ▲(규모) 4억 5,800만 유로
	4.1.	[관세] EU 집행위원장, 美 관세 조치 대응 관련 유럽의회 연설 : 美 관세 조치 대응 전략(▲對美 협상 ▲무역다변화 ▲단일시장 강화) 표명 및 단호한 대응 촉구
캐나다	3.24.	[관세] 정부, 자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고율관세를 매긴 중국을 상대로 WTO에 분쟁 협의 신청
	3.28.	[관세] 캐-미 정상통화 : 캐 총리, 4.2. 美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 조치 시행 입장 통보
독일	3.14.	[대러제재] 독일 세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압류 : 유조선 이벤틴(Eventin) 및 4천만 유로 상당 원유 압류
	3.17.	[전기차] BYD, 독일에 세 번째 유럽 내 생산 단지 건설 고려 중
	3.18.	[디지털] 애플, 독일의 독점 기업 분류* 불복 소송 패소 * 獨 연방카르텔청은 2023년 4월 애플을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분류

국가	일자	내용
독일	3.19.	[기업] 독일경제연구소(IW), 독일 기업 부실 증가 보고서 발표 : 최근 독일 내 기업 파산 건수 급증 및 추세 지속 전망
	3.29.	[배터리] 삼성물산-성일하이텍, 독일 튀링엔주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프로젝트 중단 결정(ntv)
루마니아	3.25.	[광물] EU 핵심원자재법 47개 전략사업에 루마니아 광물 개발사업 3개 선정 : (선정 사업) ▲후네도아라주 구리 채굴사업 ▲고르지주 흑연 개발사업 ▲비호르주 마그네슘 개발사업 / (자금 지원) 총 6억 1,500만 유로 수혜 예정
인도	3.17.	[FTA] 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 뉴질랜드 총리의 인도 방문(3.16~20) 계기, 10년 만에 FTA 협상 재개
	3.18.	[철강]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자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철강 제품에 200일간 12%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 발표
	3.24.	[반도체] 타타그룹 반도체 공장, FY28 2분기 완공 예정
	3.27.	[전기차] 인도 전기승용차 연간 판매 10만 대 돌파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3.19.	[LNG] 에너지부, CP2 LNG 수출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 조치
	3.20.	[석유가스] 美 내무부, 알래스카 자원 개발 관련 지원 조치 발표(3.20) : (주요 내용)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 재개방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개발 허용 ▲공공토지 제한 해제 추진
	3.25.	[석유가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産 석유·가스 수입국 대상 2차 관세 부과(4.2) 행정명령 서명 : 베네수엘라産 석유·가스 수입국의 모든 물품에 25% 관세 부과
	3.27.	[LNG] 美 알래스카 던리비 주지사, 日·美 LNG 협력 관련 닛케이 기고
	4.1.	[석유가스] 에너지부, LNG 수출 규제 장벽 제고 조치 발표 : '23년 도입된 LNG 수출 개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책을 철회/향후 개시 기한 요청을 기존처럼 사례별로 심사할 예정
일본	3.14.	[LNG] 日 규슈전력 사장, 알래스카 가스개발에 긍정 견해 표명
	3.26.	[암모니아] 日 6개 기업*, 印 그린 암모니아 사업 투자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印 재생에너지 기업 ACME Group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오디샤주에 신규 그린 암모니아 생산 시설 구축 목표 * IHI Corporation, Hokkaid Electric Power Co.,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등
독일	3.18.	[에너지전환] 독일 정부, 2025 베를린 에너지 전환 대화 개최(3.18~19) : (중점 의제) ▲COP28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글로벌 목표 설정 ▲에너지 효율 향상 ▲화석 연료 퇴출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동원 등

국가	일자	내용
핀란드	3.27.	[원자력] 핀란드 국영에너지기업 포르툼(Fortum), 핀란드 및 스웨덴 내 신규원전 추진 관련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現 시장 기반 전력 체계하에서 가격 지원과 재정 보장 없이는 신규 원전 건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 도출 /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등 3개 업체와 협력 심화 계획
루마니아	3.18.	[태양광] 부쿠레슈티 태양광 에너지 서밋* 개최(3.18~19) * 루 에너지부 후원하에 개최되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 개발 및 투자 관련 기술·비즈니스 전시회
	3.27.	[천연가스] 루마니아 부르두자 에너지부장관, 넵툰 딥* 프로젝트로 루마니아 천연가스 생산량 2배 증가 전망 * 천연가스 최소 1,000억㎥ 매장 추정 / 3.25. 첫 시추 작업 착수(OMV 페트롬, 롬가즈(Romgaz))
멕시코	3.18.	[정책] 멕시코 정부, 에너지주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 : (주요 내용) ▲규제기관 신설 ▲연방전력청(CFE) 및 멕시코석유공사(PEMEX)를 공기업으로 전환 ▲에너지 정의(Justicia Energetica) 확보 등
브라질	3.18.	[천연가스] 브라질 정부, 천연가스 관측소* 개발 추진 발표 * Natural Gas Observatory / 브라질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모은 디지털 플랫폼
호주	3.27.	[천연가스] 호주 연방 산업과학자원부, 2025년 3분기 가스수출제한조치(ADGSM) 미발동 발표
우즈베키스탄	3.27.	[천연가스]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 (1~2월 기준)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